

전북 전략사업 투자유치의 장 오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12개사 참여 '혁신벤처 INNO-JB 투자IR & Meet up' 오늘 열어

전북 전략사업 투자유치의 장(場)이 열린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29일, 도내 전략산업분야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북혁신벤처 INNO-JB 투자IR & Meet up'을 오는 30일 센터라운지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IR은 전북도내 전략산업분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상품경쟁력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IR에는 벤처캐피탈 4개사를 비롯한 엔젤투자클럽, 액셀러레이터 등 8명의 투자자가 창업자를 만날 예정이다. 1:1 매칭상담도 진행된다.

기업 IR에 나서는 스타트업은 총 12개사로 ▲문화ICT분야(우리요, 카툰, 씨티데이지, 더맘마) ▲탄소분야(디엔티, 엔시팅) ▲생활용품분야(스태크놀로지, 제이티에프, 메디휴, 부름커뮤니티, 비트윈, 아쿠엘)에서 투자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북센터는 지난 3개월간 유관기관

과 공동으로 참여 스타트업의 자료 제작과 개별피칭, 모의IR 등의 투자유치 과정을 밀착 지원해 왔다. 전북센터 관계자는 "도내 창업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기회를 확대하고, 투자 매칭의 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지사·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29일 오후 2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전북선관위 위원장과 전북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전북선관위 위원장과 전북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위원장 인사말 ▲정책선거 홍보영상 상영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안내·설명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서 서명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후보자 다짐 한마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후보자들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

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선관위는 정책선거 확산을 위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5대 공

약을 공개했으며, 6월 4일부터는 선거구내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

전북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신고자 2명에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단체장 이후 보궐선거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과 관련하여 신고한 2명에게 총 500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 A씨 및 B씨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C씨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 C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동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성 기자

선관위는 포상지급 기준에 따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올 하반기 빅데이터 허브 구축

전북도,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10억 투자 그래프 등 시각화 통해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빅데이터를 광역단위로 연계하여 이용 편의 향상과 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광역단위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개의 광역 시도가 공모에 선정(전북, 대구)됐다.

도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게 되는 5억원의 특별교부세와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 교통 등 도민의 수요가 많은 주요 데이터를 발굴 후 카테고리 별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 가공·융합을 도모하고 기초 지자체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 원천데이터 보유기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정제·저장 기반을 구축하며, 각 기초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데이터를 한 데 모아 편리하게 개방하고 그래프 등 시각화를 통해 도민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빅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게 되는 5억원의 특별교부세와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GM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전환배치 200명·무급휴직 480명

지엠(GM) 군산공장 노동조합 고용특별위원회가 오는 31일 공장 폐쇄와 관련, 잔류 근로자에 대한 거취를 확정했다. 29일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6월1일부터 군산공장 잔류인원 680명 가운데 생산직 200명이 전환 배치되고 나머지 480명에 대해 3년간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배치 현황은 부평공장 16명,

창원공장 58명, 보령공장 10명, 생산부문 외 26명, 노사부문 90명 등이다. 무급 휴직자는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수만큼 인력풀에 의거 추가 전환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전환배치 순위 결정은 근속연수, 근무태도, 인사고과, 부양가족, 고충처리, 포상 등 점수를 환산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동향

“중단없는 혁신교육 위해 힘 모을 것”

김승환 후보,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와 ‘맞손’

김승환 교육감 후보와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전북혁신교육 완성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후보와 천 교수는 2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추진해온 전북혁신교육을 완성하고, 미래백년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후보는 “천호성 교수께서 후보사퇴 후 어떠한 조건도, 단서도 없이 선거사무소 상임본부장으로 참여해주셨다”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심정이며, 앞으로 교육개혁을 완수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정책으로 보나, 그동안 살아온 삶으로 보나 (김승환 후보와) 가장 닮아 있다”면서 “내가 어렵다고 교육의 희망을, 교육의 혁신을 나몰라라 해서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김승환 후보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천 교수는 “지난 8년간 김승환 후보와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한 부분은 더욱 계승해 전북혁신교육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호성 상임본부장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함께 선거운동에 나선다. /기동취재반

“초등학교 유희교실 본연에 맞게 활용을”

이재경 후보, “학생을 위한 시설로 우선 사용하는것이 원칙”

6·13 지방선거 이재경 전북도교육감 후보는 29일 “초등학교 유희교실을 본연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후보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교육계는 초등학교 유희교실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빈 교실을 보육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유희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교총과 교육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그는 “유희교실이 나올 경우 학생을 위한 시설로 우선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며 “법적 근거를 이유로 설치 논의가 확대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논리에만 근거해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그에 따른 여러 문제와 책임을 초등교육 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반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